

타시도의 대형 재정사업 확보사례와 충남에 주는 시사점

임재영 · 이종윤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공공투자연구팀
chyim@cni.re.kr · space@cni.re.kr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나, 자체 재원만으로 충당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체계적으로 중앙정부 사업(또는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은 의미 있는 것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타시도의 성공사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충남의 성공적인 대형 재정사업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함.

CONTENTS

1. 정부예산 확보와 재정사업
2. 지역별 예타사업 확보실적
3. 재정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이해와 타시도의 사례
4. 충남의 문제점과 과제

□ 부록

요약

- 이용가능한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에서 자체 재원만으로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체계적으로 중앙정부 사업(또는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은 의미 있는 것임
- 이러한 차원에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 재정사업 확보사례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을 충남의 성공적인 대형 재정사업 유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여기서는 각 시도별 대형 재정사업(예타사업 기준) 확보실적을 바탕으로 벤치마킹을 위한 자료조사와 관계자 인터뷰 등의 기법을 통해 충남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 타 지역들의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 대형 재정사업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상황에 대처하면서 성공사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참고로 본 연구 결과물 도출을 위한 벤치마킹은 주로 대구·경북과 부산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지역은 본문에 포함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형 재정사업의 유치실적이 우수한 곳들임

01

정부예산 확보의 의미와 재정사업

- 가용자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지역 내 공공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상태에서 지역의 자체 재원만으로 증가된 정책 및 사업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임
 - 특히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갖추기 위한 정책 또는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집행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상황임
 - 구체적인 예로 지역발전을 위한 신 성장동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유무형의 대규모 인프라 공급이 요구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관련사업 유치 확보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지역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수요를 중앙정부의 재정사업에 반영하거나, 관련 재정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이 지역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즉 본 절의 제목에서 언급된 정부예산 확보의 의미는 중앙정부에서 지역으로 교부금 등 현금 흐름 측면이 아니라, 중앙정부 재정사업의 유치 및 확보를 통한 '예산확보 효과'로 한정해서 해석할 수 있음
 - 중앙정부의 재정사업 확보를 통해 발생하는 예산 측면의 여력을 활용해 지역의 다른 정책 및 사업에 대처할 수 있게 됨
- 재정사업은 그 유형을 구분하면 (그림 1)에 정리된 바와 같음
 - 먼저 재정사업은 순수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되며, 여기서 민간투자사업은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민간투자가 포함된 사업을 말함

- 이 외에도 재정사업은 사업비의 규모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다시 유형구분이 가능한데, 지금 논의 중인 대형 재정사업은 주로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들을 칭함
- 참고로 현재 사회간접자본 공급과정에 민간투자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정부의 이용가능 재원의 조달문제나 경제상황과 연계한 정부정책 기조변화와 관련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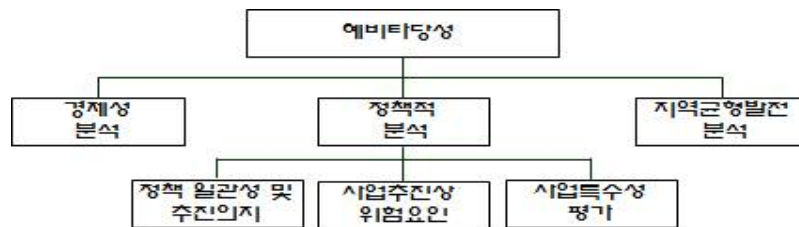
구분	재정사업		비고
	순수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	사업비 2,000억 원 이상	PIMAC 민자적격성 조사 의무화
	사업비 500억 원 (국비300억 원) 이상	- 민자사업 유형: 재정사업 과 동일(단, 사업추진방 식에서 BTL, BTO 등으로 구분) - 민자사업 진행은 관련법 및 기본계획***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비R&D: PIMAC; R&D: KISTEP)
지방 재정 투자 사업	(중앙 투자심사) 사업비 500억 원 이상		LIMAC 타당성조사 의무화
	(자체심사) 사업비 200억 원 미만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 (LIMAC 검토의견 제출)
기타사업			충청남도 자체심사



(그림 1) 재정사업의 유형 구분

- 앞의 그림들에 포함되었듯이, 정부의 재정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민자적격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그리고 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
 - 민자적격성조사는 기획재정부(2016)의 『민간투자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사회간접자본 공급 과정에 민간참여에 대한 시비를 불식시키고자 의무화됨
 - 그리고 대형 재정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非 R&D사업의 경우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수행, R&D사업의 경우에는 KISTEP 수행)를 통과해야 함
 - 지방재정투자사업 중 행정자치부의 대규모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상태임

- 즉 재정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민간참여의 확대와 경제적 타당성논리 강화가 요구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제안하거나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한 ‘재정사업의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경제성을 중심으로 하는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임
- 참고로 여기서 언급되는 타당성이란 ① 경제적 타당성, ② 정책적 타당성, ③ 기술적 타당성, ④ 지역균형개발효과 등이며, 사업성격에 따라 특히 R&D 사업의 경우 기술적 타당성이 주요하게 언급되기도 함
-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외에도, 대부분의 재정사업 진행과정에서 요구되는 타당성 분석(조사/검토/검증 등 포함)에 요구되는 사항임



(그림 2) 예비타당성조사 심사기준

- 결론적으로 대형 재정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정사업 계획내용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함
-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3절의 재정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이해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짐


02 지역별 예타사업 확보 실적

- 지역별 중앙정부의 재정사업의 유치를 위한 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 되고 있으나, 관련된 확보실적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임
 - 참고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KISTEP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을 기준으로 조사보고서를 자체 홈페이지 상에 공개하고 있으며, 사업확보와 관련된 통계분석 결과나 자료의 구축은 제한적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1년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과정을 대행하는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와 KISTEP의 타당성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전수검토를 통해 지역별, 사업 유형별로 정리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함

[표 1] 충남의 예타조사 통과 사업 현황(2011년 이후)

구분	사업명	사업비
非R&D	2011년,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사업	1,374억 원
	2012년, 삼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	1,133억 원
R&D	2016년, 연료전지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사업	708억 원
- 상기 내용 외 확보사업 · 제 2 금강교 건설사업(480억 원) · 내포신도시 첨단산단 진입도로(432억 원) · 서해선 복선전철사업(39,825억 원) - 기타(예타조사대상 선정 또는 예타 재조사 대응 중) · 대산당진 고속도로 · 국지도 70호선 ·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		

- 우선 지금까지 충남의 예타사업 확보실적은 [표 1]에 제시된 3개 사업이 대표적임

- 표 밑의  안의 내용은 자체적으로 파악된 충남의 예타사업 확보 및 대응 실적임
- 참고로 교통 SOC 사업은 그 특성 상, 해당 SOC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이 복수임

● 이 외 전수검토를 통해 파악된, 2011년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의 지역별 현황은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음

- 표의 내용은 사업을 R&D 사업과 비 R&D 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됨

[표 2]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재정사업 현황(2011년 이후)

구분	사업 수(단위: 건)		금액(단위: 억 원)	
	非R&D사업	R&D사업	非R&D사업	R&D 사업
서울	8	-	23,040	-
부산	7	1	17,525	1,563
대구	7	3	14,903	4,780
인천	4	-	7,732	-
광주	5	-	11,296	-
대전	5	-	18,107	-
울산	4	1	4,903	1,074
세종	2	-	6,158	-
경기	14	-	171,249	-
강원	5	-	24,666	-
충북	5	-	8,734	-
충남	2	1	2,507	708
전북	6	1	18,140	2,155
전남	3	1	3,289	785
경북	7	3	22,246	2,831
경남	4	2	11,264	2,134
제주	1	-	1,223	-
기타	11	38	29,597	102,291
합계	100	51	396,579	118,321
평균사업규모 (억 원/건)	-	-	3,965.6억 원/건	2,320.0억 원/건

- 자료: KDI PIMAC과 KISTEP 홈페이지 게시자료 전수검토 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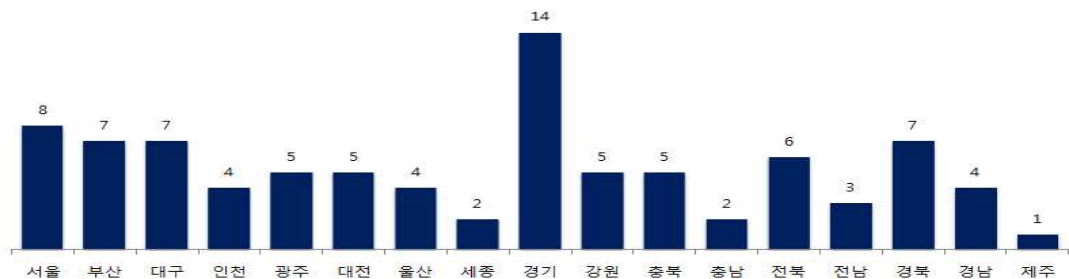
● 참고로 상기 자료를 통해 도출된 비 R&D 사업의 세부 유형별 평균 사업규모는 다음 (그림 3)에 정리된 바와 같음



(그림 3) 2011년 이후, 非R&D 사업의 유형별 평균 사업규모(단위: 억 원/건)

● 지역별 非R&D 사업 유치실적(2011년 이후 누적 계)

- 비 R&D 사업은 다시 교통 SOC 사업과 비교통 SOC 사업으로 구분되며, 앞의 (그림 3)에서와 같이 비교통 SOC 사업은 환경, 문화관광, 교육, 산업단지, 농업 등의 세부 카테고리 나뉘짐
- 지역별로 구체적인 예타사업 확보 실적은 부록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음



- 다지역 공동사업 11건 제외

(a) 非R&D 사업확보 실적(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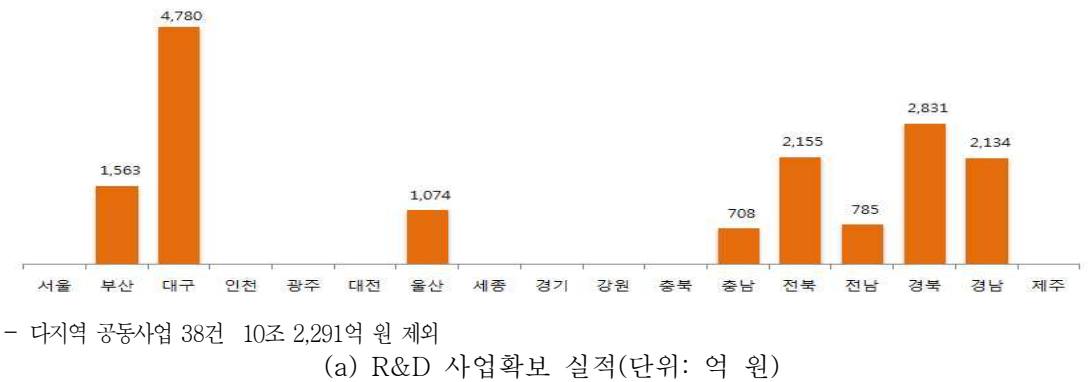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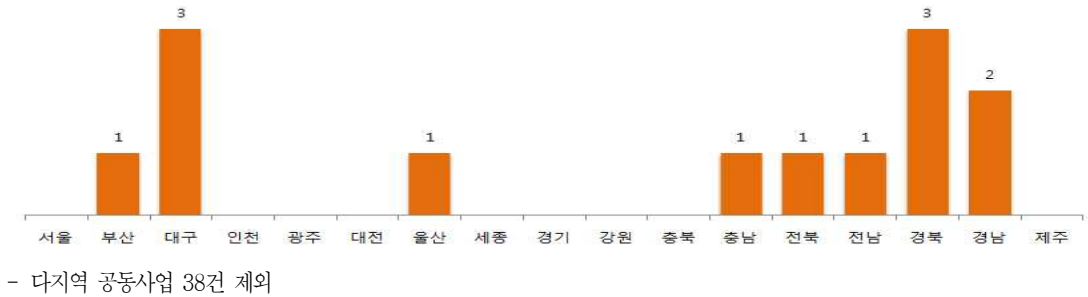


- 다지역 공동사업 11건 2조 9,597억 원 제외

(b) 非R&D 사업확보 실적(단위: 억 원)

(그림 3) 지역별 예타사업(비 R&D 사업) 확보실적(2011년 이후 누적 계)

● 지역별 R&D 사업 유치실적(2011년 이후 누적 계)



(그림 4) 지역별 예타사업(R&D 사업) 확보실적(2011년 이후 누적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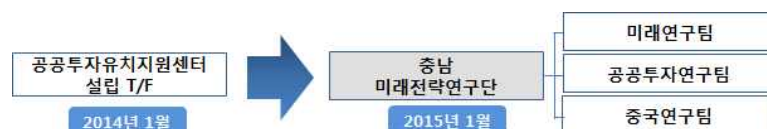
- 앞의 표와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충남의 예타사업 확보 및 유치 실적은 사업 건수나 금액 양 측면 모두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도, 사업의 유치 건수나 금액 모두에서 다른 광역시도들에 비해 저조한 실적임
 - 따라서 관련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참고로 대구·경북과 부산, 그리고 경남 등의 경우에는 타 광역시도들에 비해 활발한 유치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충남의 성공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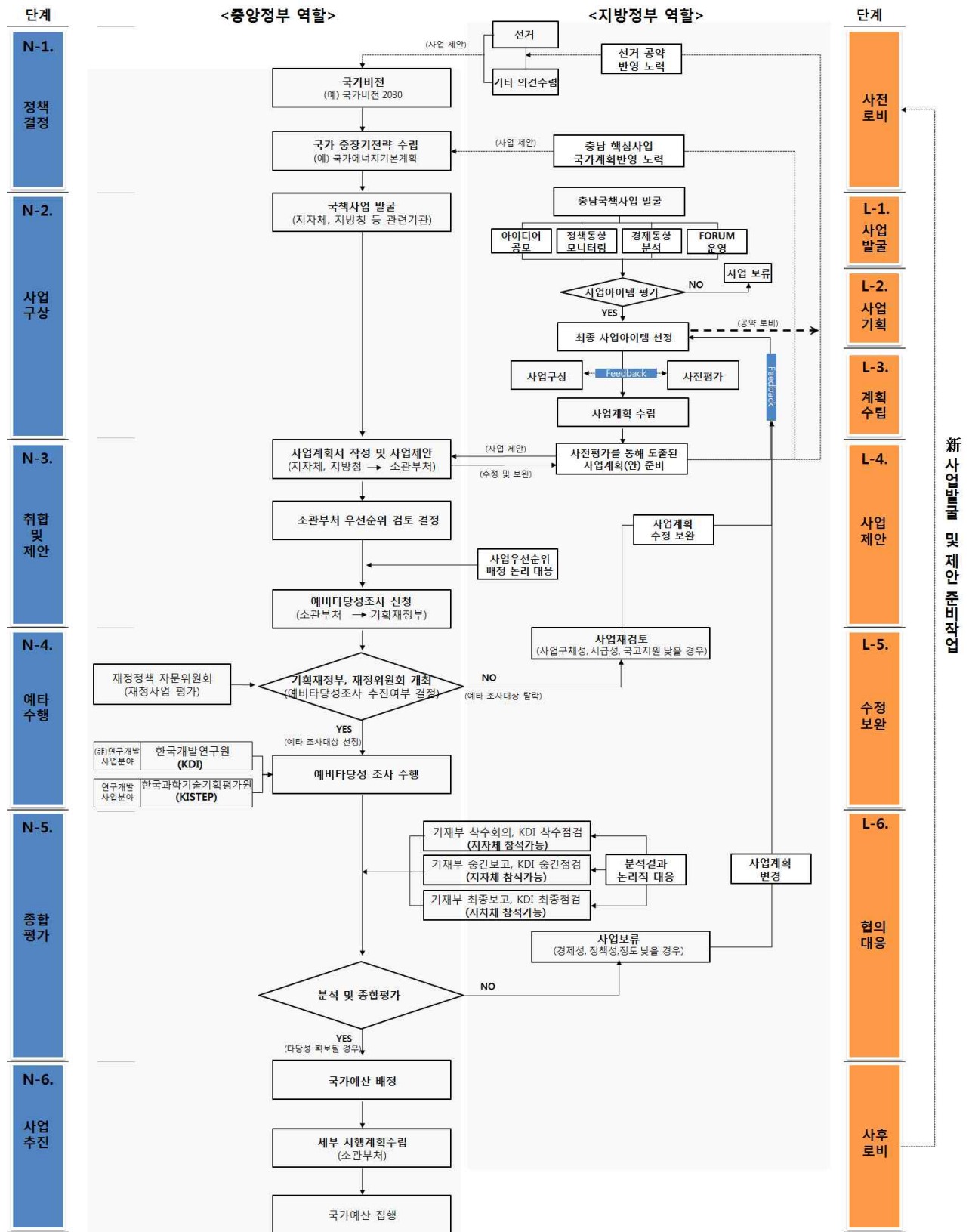
재정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이해와 타 시도의 대형 재정사업 추진과정

1. 재정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이해

-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대한 개관과 관련지침,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형 재정사업 확보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들의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과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정리된 대형 재정사업 추진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5)와 같음
 - 참고로 이 그림은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2015), 『충남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대응체계』 내에 포함된 것을 인용한 것임
 - 해당 자료는 정부의 대형 재정사업 유치작업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충남연구원 내에 설치된 미래전략연구단(아래 그림 참조)의 공공투자연구팀에 의해 작성됨



- (그림 5)에서 좌측 면은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절차를, 그리고 우측 면은 중앙의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구체적 대응과정을 체계화 한 것임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앞의 1절에서 설명된 대형 재정사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유사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가 주도하는 대형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의 경우에는 그림 상의 기획재정부가 행정자치부로, 그리고 'KDI PIMAC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방행정연구원의 LIMAC의 타당성조사'로 변경됨



-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2015), 『충남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대응체계』의 내용 인용.
(그림 5) 지역의 대형 재정사업 추진절차도

- 사업확보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과정은 ‘① 사업의 발굴과 기획’, ‘② 사업의 기본구상/기본계획(안) 수립’, 그리고 ‘③ 사전평가(타당성분석)를 통한 (최적의) 사업계획¹⁾ 확정’ 등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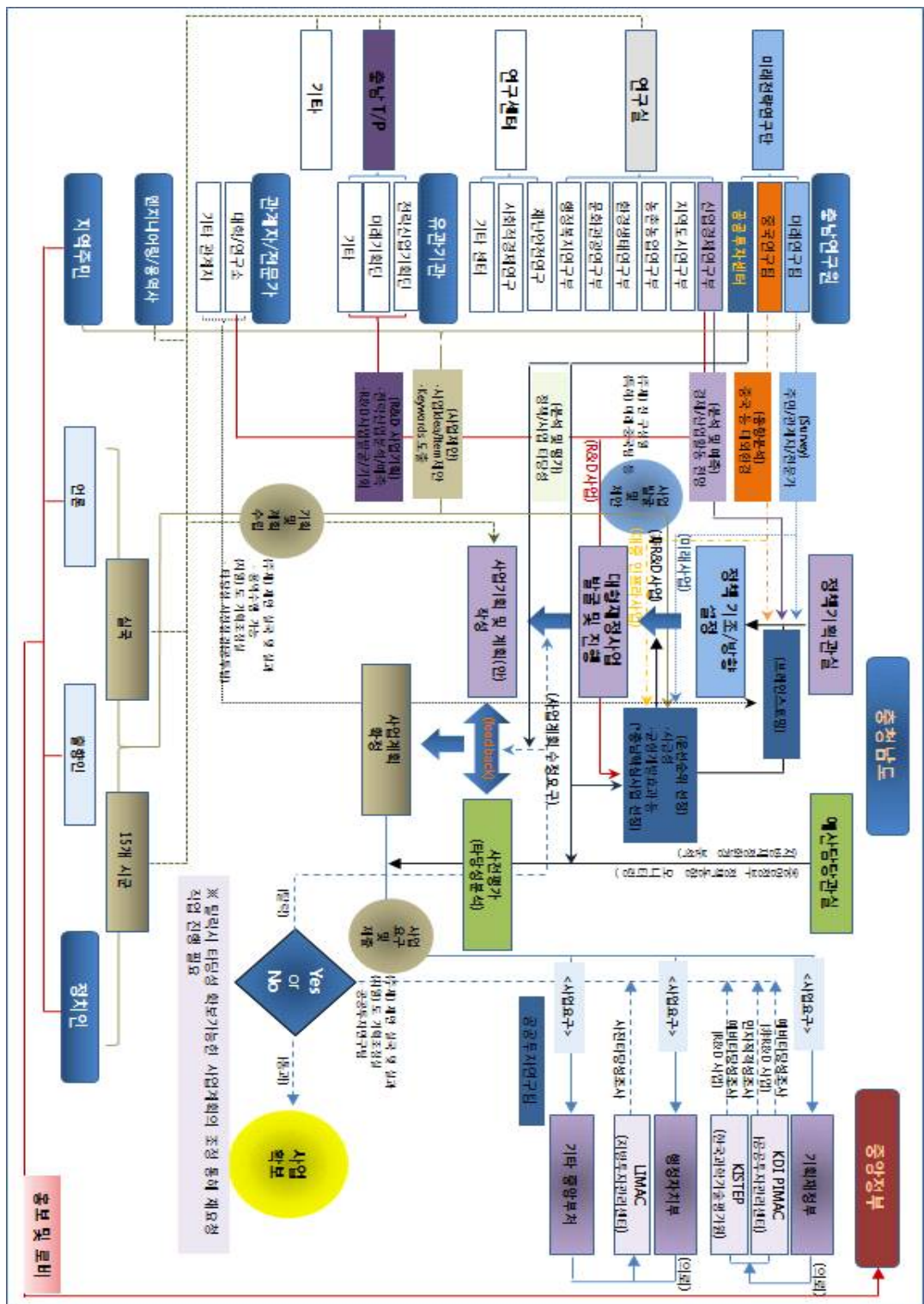
- 이 때 유의해야 할 것은 ① 항에 포함된 ‘발굴과 기획’에서 기획이 의미하는 바는 해당 재정사업 확보를 총괄하면서 관련된 자원과 시간, 그리고 인력 등의 배치와 조정을 포함하는 본부(HQ) 기능을 뜻함
 - 반면 ② 항의 기본구상은 재정사업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 사항들을 포함한 사업내용의 측면을 다루는 것임
 - 참고로 현재 충남에서는 ③ 항의 단계에는 이견이 없으나, 나머지 두 개 항(①과 ② 항)의 수행주체에 대해서 부서 간에 이견이 존재,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결론적으로 해당 과정별 참여주체는 다음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재정사업 확보를 위한 목표설정과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의 기획관실이 HQ 기능을 수행해야 함(사업계획 수립은 해당 주무부서 담당)
 - 만일 탐색(발굴)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특정 재정사업 확보가 목표로 전제되는 경우, 도의 기획관실 주도로 T/F를 구성해서 해당 사업 성격에 적합한 도 사업부와 연구원 연구부서 등을 조직화해서 대응해야함

[표 3] 재정사업 핵심 추진과정별 담당부서 정리

단계	충남도	충남연구원	기타
① 발굴 및 기획	사업부서/기획관실	연구부서/미래전략연구단	- 자문단 - 엔지니어링/용역사 등 외부자원 활용
② 기본구상/기본계획(안) 수립	사업부서	연구부서	
③ 사전평가(타당성분석)	예산실	공공투자센터	
④ 사업계획의 확정	사업부서/기획관실	-	
※ 사전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안)은 사업내용이 5W1H에 입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이러한 차원에서 재정사업 진행절차 상 지역 내 주체별 역할을 종합하면 (그림 6)과 같음

1) 여기서 언급되는 최적의 사업계획이란 사전평가를 통해 PIMAC과 KISTEP(또는 LIMAC)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탈락가능성을 최소화한 계획을 의미함.



-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2016. 12.15), 『충남 공공투자 유치지원 및 관리센터 설치계획(안)』, 공공투자연구포럼(재정사업 진행환경 변화와 관련조직 정비방향성 모색 2)의 내용 인용.

(그림 6) 재정사업 진행 절차 상 지역 내 주체별 역할도

2. 타 시도의 대형 재정사업 대응(추진과정) 종합

- 앞의 제 2 절에서도 설명된 바와 같이, 예타사업을 기준으로 대구·경북과 부산 등은 타 광역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대형 재정사업을 유치 및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또 그 성과를 확보하고 있음
 - 이 외 경남과 전북 등의 경우에도 예타사업의 확보에서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유치사업들은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과 정치권의 활발한 지역구 관리에 편승된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음
 - 반면 대구·경북, 그리고 부산 등의 경우에는 자체의 산업 및 경제를 포함한 지역발전 전략에 기반 하여 선제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확보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지역 관계지들과의 면담을 통해 선진 지역의 경우, 중장기 지역발전 전략(산업발전 전략 및 계획)을 포함한 체계적 대형 재정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 부산의 경우 해양엑스포 등을 위시로 하는 중장기적 지역발전 전략에 기반하여 관련 인프라 및 도시정비를 위한 대형 재정사업의 확보 예가 일부 포함됨
 - 대구·경북의 경우에는 지역의 중장기 산업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형 재정사업 유치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강함

※ PIMAC과 KISTEP의 공개 자료로는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대구·경북과 부산 등의 선진지역 사례에 기초하여 관계지²⁾와의 면담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정리된 대형 재정 사업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음
 - 여기서 언급되는 추진전략은 주로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타당성조사 과정을 통과하기 위한 상기 지역들의 대응과정을 정리한 것임
 - 이 때 타당성조사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생략함

2) 구체적으로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와 대구·경북공공투자평가센터를 포함 전국 개별 지역 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자들 임(참고로 서울의 경우 사업의 평가관리 기능 중심의 업무진행)

1) 단계별 대응

● 성공적인 대형 재정사업 추진전략은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음

- 본 단계별 추진전략은 결국 (그림 5) 과정의 피드백 과정과 연결되는 것이며, 결국 단계별 대응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임

① 준비 단계

가. 정부정책과의 정합성 파악

준비사업이 정부정책 흐름과 부합할 때 사업추진의 정당성이 제고됨

나. 기본 사업내용 사전협의 완료

- 부지위치나 부처 간 협의사항, 기타 결정필요 사항) 등에 대한 사전협의 완료
- 유사사업이 지자체간 중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사전협의를 완료된 경우 상대적으로 빠른 심사진행

② 사업선정 단계

가. 관련 중앙정부 부서 담당자와 협의

- 중앙정부 담당자 대상 사업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이해제공, 중앙부서 내에서의 사업제출 순위 제고

나. 기본 요구사항 준수 철저

-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의거 초기에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와 내용이 있는데, 누락사항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주의해야 함
- 특히 심사의뢰조서의 작성과정에서 사업내용의 記述이나 특히 숫자의 오기로 인해, 사업계획 내용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자료 제출 전 검토작업 필요

③ 조사단계

가. 제출요청 자료의 신속한 작성과 제출

- 타당성조사 및 심의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의 경우 사업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 필요

나. 인식의 전환

- 타당성조사와 사업심 기관에 대한 인식전환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 상기 기관이 지역을 대신하여 지역사업을 정부에 설명해주는 루트임을 명심
- 따라서 타당성 조사 및 심사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지역사업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

④ 통과 이후 단계

가.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되고 반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점검 강화 필요

나. 사업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요구

- 사업운영 과정에서의 공정성 담보 위한 운영의 시스템화 필요
- 통과 이후 사업 운영주체(개인 또는 기관)의 공정성 결여로 사업의 유지나 추가사업 확보에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음

2) 재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

① 전문지원 기관과의 협력

가. 지역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조시스템 구축

- 사업계획(안)과 타당성분석 결과 간 피드백 과정을 통해 최적의 대안 제출
- 이러한 피드백 과정은 추진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내용 조정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 축적이 가능케 함

나. 예비타당성조사 전문 인력 Pool 구축 및 관리

- KDI의 PIMAC, KISTEP, LIMAC 등 중앙의 전문기관과의 N/W 구축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호적 분위기 조성(해당 전문인력이 심의위원 후보가 될 수 있음)

- 해당 전문 기관 및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와 자문

② 사업부서 및 사업추진 지원부서 교육제도 마련

가. 예비타당성조사 준비 프로그램 도입

나. 예비타당성조사 전담 공무원제 마련(순환근무제에 따른 노하우 손실문제 대비)

③ 전담조직 설치

가. 총괄 관리 및 조정기구

- 부서간 협력과 정보공유 부족문제 해결
- 사업 우선순위 조정, 효율성 제고

나. 예비타당성조사 전담 공무원제 마련

- 해당 전문인력의 경험과 노하우 축적
-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노하우를 공무원 조직 내 체화하는 경로의 구축

④ 성공사례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관련내용 전파와 확산

04

타지역 사례를 통해 살펴 본 충남의 재정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과 과제

1. 충남의 대형 재정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도출

-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토대로 충남의 대형 재정사업 추진과정에서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주로 다음과 같음

① 재정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실천부족

- ① 중장기적인 체계적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이해부족
(⇒ 지역 내 각 주체별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
- ② 과학적 체계적 사업발굴 및 기획시스템 부재
(⇒ 법정계획과 재정사업 확보작업의 단절)
- ③ 피드백 장치를 포함한 사업확보 지원체계 미비
(⇒ 사전평가 통한 지역 제안(또는 요구 사업)의 채택가능성 제고)

②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한 미래기획과 대형 재정사업 발굴작업의 체계화 미흡

- ① 패러다임 및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체계 미비
(⇒ 사업발굴 과정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②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 및 예측 작업과 사업발굴의 단절
(⇒ 예를 들어, 산업생태계에 대한 분석 및 예측을 통한 대형 재정사업 발굴 미흡)

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트렌즈 변화에 대한 이해와 사업발굴 단절

(⇒ 수소전지, 3D프린터 등 과학기술 발전에 입각한 선제적 사업발굴 과정 생략)

③ 대형 재정사업 추진의 체계화 미흡

㉕ R&D 사업과 비R&D 사업의 이원화 진행

(⇒ 기관별 사업부서별 통합적 관리체계 미비로 효율적 연계작업의 성과 기대 못함)

㉖ 피드백을 매개로 하는 패자부활전의 중요성 인식 부족

(⇒ 탈락사업의 타당성 추가확보 위한 사업계획(안)과 타당성 사이 피드백 장치 결여)

㉗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트렌즈 변화에 대한 이해와 사업발굴과의 단절

④ 기타: ‘기존관행’과 ‘능동적 재정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 및 참여의지’ 부족

2. 과제: “대형 재정사업 확보과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전환 필요”

● 앞의 3절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충남의 경우 주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기획 및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문제점은 사업을 발굴해서 그 내용을 체계화하여 중앙정부에 해당 재정사업을 요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계획(안) 완성하는 과정에 대한 수행주체의 결정과정임

– 앞서 언급된 ‘법정계획 수립과 재정사업 발굴의 단절’, ‘산업생태계 분석과 재정사업 발굴 단절’ 등의 문제점들과 같이, 재정사업의 발굴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원의 연구부서, 충남도청 사업부서의 고유 업무 진행 과정과 연결됨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예타사업을 포함한 대형 재정사업의 발굴과 확보작업을 원칙에 입각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예타사업과 같은 대형 재정사업의 경우 산업 및 경제 영역을 포함한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 또는 계획에 기초하여 제시되었을 때에 사업확보를 위한 타당성 논리에 대응하기 용이함을 선진 지역 사례를 통해 언급함

– 왜냐하면 미래지향의 전략적 사고 하에 입안된 계획내용의 타당성 논리가 상대적으로 탁월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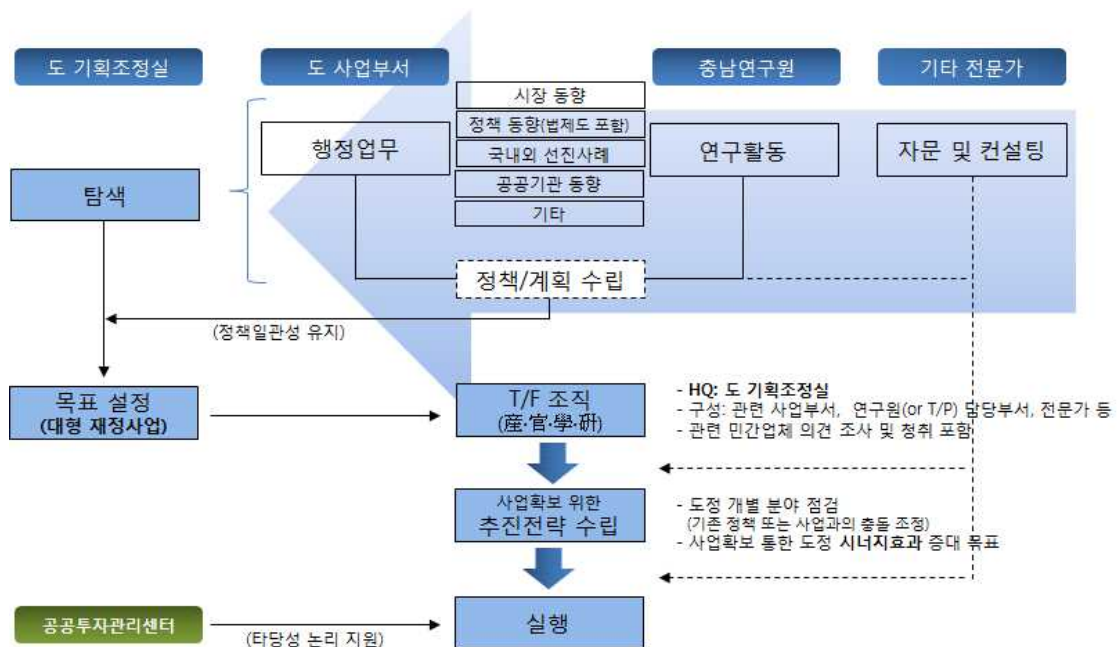
수 밖에 없음

-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체계적 진행을 위해 연구원과 도 차원의 조직정비가 이루어짐

- 충남도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부서의 상시 업무진행 과정에서 대형 재정사업이 발굴되고 진행되며, 도 기획조정실은 다양한 참여주체들과 협력하여 소기 목적달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기획·조정 하는 조정자 또는 HQ 역할이 주임

- 이러한 관계는 충남연구원 내 개별 연구부서와 미래전략연구단의 예에도 공히 적용됨

- 이 때 개설 예정인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해당 재정사업의 사업계획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논리개발과 진행지원이 주 임무임



(그림 7) 재정사업의 발굴과 진행 절차(안)

- 그리고 현재 대형 재정사업의 발굴과 실질적인 유치진행을 위해서는, 그림에 포함된 개별 참여주체들 사이의 이해관계 및 업무역할 조정 및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본부기능의 작동이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앞의 그림에 포함된 바와 같이 T/F의 조직을 통해 부분적 해결이 가능함

- 우선적으로 대형 재정사업의 구체적 대상을 포함한 단기적 목표설정을 위한 아이디어 취합과 사업발굴을 담당하는 T/F의 조직화나 기능부여 작업이 필요함
 - 다음 단계에서는 개별 목표(재정사업)별로 해당 사업성격에 특화된 추진 T/F를 구성해서, 사업단위 진행을 일임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부록에 제시된 개별 예타조사 통과사업들의 경우, 충남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특성을 감안하여 충남에서 요구되는 대형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작업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특히 이 때 충남의 환경과 특성은 지역경제 내 산업생태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므로, 관련된 분석연구에 기반한 충남형 대형 재정사업의 발굴이 가능함

[표 1] 지역별 非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현황(2011~2016)

NO	사업명	총사업비	지역	분야
1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792	경북	문화관광
2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	6,468	경남	철도
3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2,817	부산	경제산업
4	영양댐 건설사업	3,139	경북	댐
5	광주 제2컨벤션센터 건립사업	1,193	광주	문화관광
6	우이~신설 연장선	2,940	서울	철도
7	대구사이언스파크 진입도로 건설사업	567	대구	도로
8	울산/미포 국가산단진입도로(오토밸리로) 개설사업	907	울산	도로
9	수출전략형 FGCV 연구개발사업	1,736	전북	경제산업
10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2,932	강원	경제산업
11	오송~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신설	1,328	충북	도로
12	인천항 영종도 2단계 준설토주기장 호안조상사업	1,876	인천	기타
13	차세대 뇌연구를 위한 의료영상시스템 개발사업	1,094	인천	경제산업
14	제주 돌문화공원 관광지 개발사업	1,223	제주	문화관광
15	EBS디지털통합사옥 건립사업	2,043	경기	교육
16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7,426	경기	도로
17	국가대표 종합훈련장(2단계) 조성사업	3,306	충북	체육
18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체육시설 사업	4,683	광주	체육
19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표준공장 재건축사업	1,459	경남	산업단지
20	서대구공업단지 재생사업	1,036	대구	산업단지
21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대상사업	747	전국	도로
22	대구제3공업단지 재생사업	1,907	대구	산업단지
23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도로건설)	825	대전	도로
24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사업	10,574	경북	산업단지
25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사업	1,374	충남	환경
26	대구의곽순환고속도로(성서~지천)건설사업	5,242	대구	도로
27	동해/목호항 3단계 개발사업	16,895	강원	항만
28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	2,435	충북	수도
29	국지도58호선(송정~문동)건설사업	2,298	경남	도로
30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8,260	전국	철
31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741	경기	수도
32	삽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	1,133	충남	기타
33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사업	2,563	전북	의료보건
34	고덕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2,121	경기	산업단지
35	부산항신항 남측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 개발사업	3,594	부산	산업단지
36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사업	2,180	울산	교육

(표 계속)

NO	사업명	총사업비	지역	분야
37	부산항 신항 항로증심(2단계) 준설사업	756	부산	항만
38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	3,019	전북	도로
39	영암/해남 관광레저기업도시 동측진입도로 개설사업	2,756	전남	도로
40	대전도시철도 2호선	13,617	대전	철도
41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1,852	인천	경제산업
42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460	경기	도로
43	영동고속도로(서창~안산) 확장사업	3,421	경기	도
44	비축기지 광역화/현대화 사업	1,169	전국	농업
45	군장항 항로준설[2단계] 사업	1,837	전국	항만
46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개설사업	839	대구	도로
47	부산역 일원 철도부지 종합개발사업	4,963	부산	경제산업
48	수도권(Ⅱ)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2,868	전국	수도
49	흑산도 공항 건설사업	1	전남	공항
50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환경개선사업(Ⅲ)	722	대전	기타
51	울릉도 공항 건설사업	4,932	경북	공항
52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6,240	전국	의료보건
53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1,037	충북	도로
54	상개~매암 대도시권 혼잡도로 건설사업	966	울산	도로
55	을숙도~장림고개 대도시권 혼잡도로 건설사업	1,638	부산	도로
56	호남고속도로(광산~동광주IC) 확장사업	2,763	광주	도로
57	신답교~경주시계 광역도로	850	울산	도로
58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118,524	경기	철도
59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사업	2,789	대구	철도
60	레고랜드 코리아 기반시설(교량) 조성사업	954	강원	교량
61	올림픽스포츠클럽플렉스 조성사업	1,229	서울	체육
62	영동고속도로 안산~북수원 확장사업	3,264	경기	도로
63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2,211	강원	관광
64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1,165	경북	환경
65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1,241	전국	복지
66	새만금 남북2축 도로건설사업	9,190	전북	도로
67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	1,164	경북	도로
68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면유 지원사업	2,952	전국	복지
69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사업	1,647	세종	의료보건
70	사학연금 서울회관 재건축사업	6,294	서울	교육
71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480	경북	농업
72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2구역) 호안 축조사업	1,039	경남	항만
73	국립아트센터 건립사업	952	부산	문화
74	상무지구~첨단산단 혼잡도로 개선사업	1,645	광주	도로
75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기준선 고속화사업	1,539	서울	철도
76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853	전국	보건
77	대구 물 사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2,523	대구	경제산업
78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사업(1단계)	643	전북	환경
79	해양경찰 정비창 확장이전사업	2,805	부산	생태환경
80	용사의 집 재건립	1,936	서울	복지
81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989	전북	환경
82	중부권 광역우편집중국 건립사업	836	대전	산림
83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4,511	세종	문화

(표 계속)

NO	사업명	총사업비	지역	분야
84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2,249	전국	전력
85	국가재정관리 가치제고를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181	전국	기타
86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500	경기/강원	철도
87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사업	953	서울	문화
88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사업	628	충북	문화
89	국지도82호선 도로확장공사	1,722	경기	도로
90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1,012	광주	경제산업
91	여의도우체국 재건축 사업	1,812	서울	청사
92	월곡~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21,121	경기	철도
93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1,861	경기	농업
94	인천신항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2,910	인천	항만
95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	2,107	대전	철도
96	흑산도항 건설사업	532	전남	항만
97	도봉산~옥정 전철 건설사업	6,337	서울	철도
98	수원발 ktx 직결사업	2,883	경기	철도
99	인천발 ktx 직결사업	4,162	경기	철도
100	춘천~속초 철도건설	1,674	강원	철도

[표 2] 지역별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현황(2011~2016)

NO	사업명	총사업비	지역
1	신성장동력 장비경쟁력 강화사업	8,228	국가
2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1,942	국가
3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	1,883	국가
4	미래전략소프트웨어기술개발사업	2,400	국가
5	차세대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국가
6	가교적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사업	2,400	국가
7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10,600	국가
8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사업		국가
9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기반구축사업	1,700	국가
10	맞춤예방연구역량강화사업		국가
11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및성과확산사업	1,847	전남/경북
12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사업	3,692	대구/경북
13	WPM(WorldPremierMaterials)사업	11,881	국가
14	나노융합2020사업	5,130	국가
15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5,860	국가
16	온실가스 감축실현을 위한 차세대 제철기술 개발사업	2,800	국가
17	골든 시드 프로젝트 사업	4,910	국가
18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2,328	대구
19	범부처 giga korea 사업	5,501	국가
20	발전용 고효율 대형가스터빈 개발사업	2,850	국가
21	f1서킷을 연계한 패키징 차부품의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785	전남
22	방사성동위원소 플랫폼 구축사업	941	국가
23	폐자원 에너지와 기술개발사업	1,996	국가
24	미래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	850	경북
25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 연구사업	3,244	국가
26	그래핀소재부품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1,452	국가
27	신산업 창출을 위한 SW융합 기술 고도화 사업	997	대구
28	기후변화대응 통합정책기반기술 개발사업	835	국가
29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	5,788	국가
30	바이오화학2.0(그린카본코리아 프로젝트 사업)	2,155	전북
31	미래형 치과산업벨트 구축 사업	775	대구/광주
32	다목적 전공역 위성항법정보시스템 개발구축사업	1,280	국가
33	센서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 육성사업	1,508	국가
34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1,283	경남
35	유해화학물질사고 환경피해 예방 및 관리 기술개발사업	1,084	국가
36	한국형 달 탐사선 개발사업	1,978	국가
37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사업	669	국가
38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사업	888	부산/전남
39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	709	경북
40	ICT융합 인터스터리4.0(조선해양) 사업	1,074	울산
41	나도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851	경남
42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용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사업	1,272	경북
43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1,865	전남/경북
44	자동차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 사업	1,455	대구
45	연료전지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사업	708	충남
46	제조업 혁신 3.0 물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	550	대구/경기

(표 계속)

NO	사업명	총사업비	지역
47	국가 항암신약개발사업	848	국가
48	지능정보사회 선도 AI 프로젝트	1,704	국가
49	유전체 HEALTH-ICT 융합 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	752	국가
50	경량소재 개발사업	510	국가
51	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	1,563	부산